

# 민주 도당 “K뉴딜 1번지 전북 만들 것”

###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에너지 자립도’ 표방 RE100 그린산단 구축·디지털 전북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이 “K-뉴딜 1번지 전라북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道)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당과 도가 함께하는 뉴딜 추진분부를 구성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전북도당 K-뉴딜위원장, 나인호 디지털뉴딜분과 위원장, 이종희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최낙관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공기관과 연계 ‘디지털 전북’ 추진 ▲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제시했다.

K-뉴딜 1번지 만들기의 핵심에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를 두 축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LX국도정보공사 등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핀테크 산업 특구,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생명 특구, LX국도정보공사와 드론산업, 디지털 트윈 특구는 물론 수소경제관련 특구 조성도 담겼다.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뉴딜펀드 전문 자산운용사 유치와 육성과 전북 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전북 사회적 뉴딜도 포함됐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북형 K-뉴딜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부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겠다”면서 “당정학 뉴딜 연석회의를 구성해 도내 대학과 인재 참여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호영 전북도당 K-뉴딜위원

장은 “K-뉴딜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전북도당 K-뉴딜 위원회가 전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북 동부권은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그린뉴딜을 이룰 수 있다”면서 “산림 수종 개량 등을 통한 목재를 확보해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산림 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성경찬 도의원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해야” 촉구



전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1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감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논의됐으나, 그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경제·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만에 통과됐지만,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30여년의 세월 동안 집행기관은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등으로 역할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비대해져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성 의원은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예산편성,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의회 의원별 5분 발언

### “항공대대 안전 심각한 위험 초래”

황영석 부의장,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관련

전주시가 계획하고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항공대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황영석 부의장은 1일 5분 발언에서 “소중 최대사거리가 25km에 달해 항공운항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돌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km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도동 이전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인근주민들의 동의 를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전주시는 두 차례 모두 인근주민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켰다”며 이전계획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회·집행부 협력관계 실현 중요”

최영일 도의원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북도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강력한 선제 대응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나가자는 목소리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생산적 협력관계 실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과 반목하는 관계가 아닌 생산적 협력을 해야만 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 “자치경찰제 핵심, 정치적 중립성”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은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격이 지방자치 행정 분야에서 경험·학식·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위원 추천이 남용되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전북도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공명정대한 권한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 “도박예방교육 실효성 있게”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 전북도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박 문제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인입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현행 전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박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면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박예방교육의 경우 지난해 전체 학생 수의 약 10%인 약 202,000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 개선율”

김정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이후 그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법률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와 학생은 총 5곳 2,068명이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의 예외 규정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평균 수준의 지원액이 지원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공공건축물 장애인 시설 미비”

한완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산하기관 및 도교육청·산하기관·학교 등 도내 공공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준수조사 결과, 아직까지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법적의무와 관계없이 이 도내 공공건축물 전체에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 50%로 확대 법적 근거 마련

민주 김운덕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전북 전주 갑)은 지난 2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운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김운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 시범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로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인재의 확보, 전국 지사를 보유한 순환근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해 형평성까지도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중심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위, 뉴딜 추진상황 등 청취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군산3)는 1일 전북중심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국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연계 뉴딜정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노조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동용 위원장(군산3)은 “전북도의 초광역 발전전략과 전북형 뉴딜 과제가 반드시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도의회 공공특위는 전북을 K뉴딜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중앙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서울·부산과 차별화된 전북금융중심지 전략 마련 등 공공기관 유치를 도의회와 도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병철 위원(전주5)은 “혁신도시의 지역이 역차별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활용해 스마트블리 조성 등 지역이 고부 잡사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김제2)은 “민주당 국가 균형발전 특위에서 메가시티 전략에 전북이 강소권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전북도와 사전공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전략에 전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내외 소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도내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실용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교육위원회)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실현 방안과 호연 기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심신을 수련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도내 청소년활동 활성화 기틀을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



진형석 도의원 “지역간

보훈수당 개선해야” 건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지급액이 지역간 20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들의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건의안’을 통해서 밝혀졌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군경유족수당의 경우, 서울 양천·은평구 등은 1만 원을 지급 하는데 반해, 강원 홍천·인제군 등은 2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 2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시·도별 보조금 및 시·군·구 부담금의 현저한 차이가 확인돼 시급히 개선 하라고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